

노동존중 희망고문, 해고노동자 영정 다시 거리에

쌍용차지부, 6년 만에 대한문 분향소 차려...박근혜 지지단체, 폭력·욕설·침탈 시도 분향 방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대한문 앞에 자본과 국가가 살해한 고 김주중 조합원의 분향소를 차렸다. 6년 전 박근혜 정권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짓밟고 만든 화단 바로 그 자리다.

노조 쌍용차지부는 7월 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리하고, 국가폭력, 사면살인 희생자 쌍용차 고 김주중 조합원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쌍용차 정리하고 문제 해결과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 회복,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정리하고와 국가폭력, 양승태 재판거래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서른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며 “국가가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폭력과 사법 농단 책임지를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쌍용차 해고자들은 지난 10년간 범죄자로, 폭력집단으로 낙인찍혀 재취업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생계를 위해 전국으로 흩어졌고 쌍용차를

다했다는 이력은 주홍글씨로 남아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남은 해고자들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윤치선 손잡고 손매기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하는 “쌍용차 해고자들이 당장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한다. 하루가 절박한 사람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공허하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2009년 실인과 같은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고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부동산과 퇴직금까지 가압류했다. 한국 사회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잔인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해야 한다”라며 대한문 분향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방해 속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노조와 쌍용차지부, 추모객들이 분향소를 설치하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노동자와 추모 시민들에게 의지를 겁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분향소 천막을 빼앗으려 했다.

추모객들이 분향하는 동안 보수단체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군기를 들고 “죄과빨갱이들은 시체장사 하지 말라”라며 고인에 대한 추모를 방해했다. 경찰은 중립인 척하며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폭언을 방관했다.

김득중 지부장이 고 김주중 조합원의 영정을 들고 있어 추모객들을 맞았다. 조합원들과 추모객들은 맨바닥에서 헌화하고 절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지부장, 임원들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 같이 대한문 분향소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1월 3일 쌍용차지부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해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2013년에 쌍용차 평택공장 맞은편 송전탑 고공 농성장을 찾아 한상균 전 지부장 등 농성조합원들을 면담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8,100억 원 공적자금 받고 77억 원 과태료 문다는 한국지엠

한국지엠, 3일까지 직접 고용 명령 거부... “해고자 복직·정규직화 특별 교섭 나와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함께 살자 대책위원회>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행정지시 불이행을 비판하고, 한국지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함께 살자 대책위원회>는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하고, 시정명령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은 현재 8,100억 원을 지원받고 난 뒤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한국지엠이 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면 현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7월 3일까지 노동부 창원지청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파견 판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3일까지 직접 고용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언론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수사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7월 4일 “고용노동부 지시를 거부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7



억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3지회(창원 부평, 군산)와 해당 지역지부, 한국지엠지부의 논의에 따라 한국지엠 사측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정규직화 계획을 먼저 마련하면 비정규직 상태로 복직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 창원공장 64명, 부평공장 11명, 군산공장 8명의 해고자가 있다.

한국지엠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유로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며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두

번에 걸친 판결로, 노동부는 직접 고용 시정명령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못 박았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노조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대해 단계로 협의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안했지만 이것도 못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정부는 한국지

엠의 한국의 법질서 무시해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사회 정의 기업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환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판결이 나왔다. 한국지엠이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고 시정명령은 거부하고 있다”라며 “한국지엠 불법파견 진정을 2004년에 했는데 13년이나 끌었다. 다들 13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을 규탄하기 위해 7월 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자동차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3일, 투표자대비 73.87% 가결 발표...6일 쟁대위 출범식, 4~10일 집중교섭, 13일 6시간 파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허부영)는 7월 3일 ‘7월 2일 2018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대비 73.87%로 가결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하계휴가 전 2018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6월 20일 12차 단체교섭 결렬 선언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

의조정 신청을 했고 2일 중노위가 현대차에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부는 3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부는 7월 13일 주야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양재동 본사 직격투쟁을 벌인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3일 지부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각종 현안 협의는 12일까지 종료 ▲회사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직무교육과

나이별 생애교육 제외)은 13일부터 전면 중단 ▲4일부터 상급 각 정문 출투·유인물 배포·철야농성 돌입 ▲4~1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4일 13차 본교섭 재개 ▲6일 2018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이후 투쟁일정은 7월 10일 쟁대위 회의에서 결정기로 했다.

“현대차, 사회양극화 해소 금속노조 요구 받아라”

3일,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기자회견... “산별 임금체계 논의 요구 응하면 파업 안 한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동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은 노조의 사회 양극화 해소 관련 요구안을 받아들여라”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7월 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와 하후상박 연대임금 인상 ▲금속 산별 노사공동위원회 참여 등을 현대차그룹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버티고 있다. 노조는 7월 9일까지 요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에 더불어 더 낮고 어려운 곳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있다. 금속노조는 하후상박 임금 요구안으로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현대자동차지부의



교섭이 다시 열리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진두지휘에 나서겠다”라며 “현대차그룹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선다면 노조는 쟁의 중이라도 교섭에 나설 수 있다”라고 현대차그룹에 교섭을 촉구했다.

허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공장 노동자가 투쟁을 펼쳐려 한다”라며 “원청과 하청 비정규, 정규, 대공장, 중소기업을 넘어 임금 격차를 개선시키는 산업별 임금체계 논의 요구에 회사가 응한다면 우리가 파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와 주 최장 52시간 노동제 도입과 관련한 인원 보충 문제 등 현안을 현대차그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강상호 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올해 기아차 임단협 핵심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이다.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통상임금 문제는 분쟁이 아닌 적용만 남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상호 지부장은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도입은 노동시간 축소와 신규채용으로 일 자리를 나누는 취지이다. 회사는 외주화를 언급하며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부는 끝까지 싸워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치렀다. 조합원 투표자 대비 73.87%의 찬성으로 총파업 의지를 확인했다. 노조는 7월 13일 전 조합원 주야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진격투쟁을 전개한다.

“노동부는 최종범, 염호석 열사 앞에 꿇어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 불법파견 은폐 공무원 고소·고발’... “노동부, 조직범죄에서 손 떼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죽음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정현욱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열한 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와 공무원 비밀 누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은폐, 고용노동부가 최종범, 염호석을 죽였다’

김영주 장관이 직접 열사 앞에 사과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김영주 장관이 최종범, 염호석 열사 앞에 직접 사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의결 근거 자료 전체 공개 ▲삼성 불법파견 은폐 관여 공무원 전원 징계 ▲삼성 불법파견 확인하고 즉시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다.

나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땅속에서 눈물을 멈출 수 있다”라며 삼성 불법파견 은폐를 촉구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현욱 전 차관과 범죄에 관여한 고위공무원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무원 비밀 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